

## 유성기업지회, 오체투지로 청와대까지

유성기업 불법 직장폐쇄 7주년 결의대회 ... “현대차의 유성기업 노조파괴 범죄, 제대로 조사하라”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아산지회,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영동지회 조합원들이 5월 18일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유성기업 5.18 노조파괴, 불법 직장폐쇄 7주년 결의대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오체투지로 행진을 했다.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가 유성기업 노조 파괴 사건을 재조사가 필요한 사건 목록에 올렸다가, 현대차와 창조건설링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보류를 결정했다. 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은 청와대에 이 같은 결정을 바로잡고 노조 파괴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아 오체투지를 벌였다.

이날 오체투지 투쟁에 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아산지회와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영동지회 조합원들과 양쪽 지부 조합원, 연대 대오가 함께했다.

김정태 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결의대

회에서 “검찰이 재벌의 편에서 노동자를 탄압하고 억압한 과거를 감추려고 유성기업 노조파괴 재조사를 보류했다”라며 “오늘 오체투지는 유성기업 노동자의 아픔을 나누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노동존중의 허구를 폭로하기 위한 투쟁이다”라고 정의했다.

정원영 노조 충남지부장은 “유성기업 조합원들의 일상을 되찾는 투쟁에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오체투지를 시작하는 심경을 밝혔다.

노조 충남지부, 대전충남지부, 유성기업아산지회, 유성기업영동지회,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충북본부 대표자 30여 명이 소복을 입고 오체투지를 시작했다. 오체투지에 나선 조합원들은 서울시청 옆 파이낸스 빌딩 앞을 떠나 두 시간 넘도록 청와대 앞까지 이동했다. 청와대 앞에 도착한 조합원들은 정리집회를 열고 항의서

한을 전달했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정리집회에서 “유성조합원들이 노조파괴 이후 8년 동안 목숨을 잃고, 우울증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검찰과거사위 조사에서 빠졌다”라며 “청와대는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가 왜 재벌 이익에 따라 노동자를 탄압한 검찰을 조사하지 않는지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훈 노조 유성기업영동지회장은 “검찰과거사위가 현대차 재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성기업 사건을 조사할 수 없다고 한다. 말도 안 된다. 재조사는 제대로 해야 현대차의 범죄 사실을 재판에 반영할 수 있다”라며 “청와대가 현대차의 노조파괴 범죄를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지켜보겠다. 오늘의 오체투지는 그 투쟁의 시작이다”라고 경고했다.

# “노동부·검찰·경찰은 삼성의 이익을 집행했다”

노동부·검찰·경찰, 삼성과 결탁 노조 파괴 ... 삼성 노조들, “청와대가 수사 지휘하라”

삼성 노동자들이 “삼성그룹과 공권력을 휘두르는 국가기관 사이의 정경유착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 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삼성지회, 삼성웰스토리지회, 서비스연맹 삼성에스원노조는 5월 17일 청와대 앞에서 ‘검찰-경찰-고용노동부



동부, 공권력 전반의 삼성유착, 청와대는 답하라’ 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삼성그룹 노조는 ▲삼성과 사정 당국의 유착에 관한 청와대 수사 지휘 ▲국가 권력 내부 적폐 청산과 노조 할 권리 지키기 ▲ILO 핵심협약 비준과 부당노동행위 형벌 적용 상향 추진 등을 촉구했다.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삼성그룹과 결탁한 핵심 권력기관으로 고용노동부와 검찰, 경찰을 지목했다. 지회는 공권력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삼성그룹과 결탁해 노조파괴 범죄를 도왔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노조 파괴 범죄를 수사하는 권력 기관들이 공범이

기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노동부와 검찰, 경찰을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삼성 노조파괴 대응팀 류하경 변호사는 경찰이 삼성과 결탁해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엄호석 열사 시신을 흠쳐간 과정을 증언했다. 류하경 변호사는 “삼성은 천륜을 어겼고, 경찰은 법을 집행하지 않고 삼성의 이익을 집행했다” 라고 성토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소송대리인인 조이현주 변호사는 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수시 근로감독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조이현주 변호사는 “노동부 상부가 개입해 불법파견 결론을 뒤집었다. 노동부는 수사감독결과 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하면서 불법파견 증거를 일부러 누락했다” 라고 밝혔다.

이승렬 노조 부위원장은 “검찰은 유성기업 노조파괴 범죄 재조사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보류했다.

현대차그룹은 유성기업 노조파괴를 8년째 배후조종하고 있지만, 사법당국은 재벌 권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 라고 비판했다.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오는 7월 14일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지회는 단계별 투쟁계획을 발표하고 삼성그룹 내부 노조 조직화를 넘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삼성 노조 대표자들은 삼성과 사정 기관 사이 정경유착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촉구서’ 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 “지엠과 관련 산업 노동자 총고용 보장이 정상화”

산은-한국지엠, ‘기본계약서’ 숨겨 ... 지엠범대위, “줄속심사, 줄속협상은 무효”

지엠 황포 저지, 노동자 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지엠 범대위)가 “부실 경영 실사에 기반을 둔 한국지엠 기본계약서 체결은 원인 무효” 라고 주장했다. 지엠 범대위는 산업은행이 부실경영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국민 세금 8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비판했다.

지엠 범대위는 5월 1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부실실사-줄속협상으로 만든 한국지엠 기본계약서 체결 규탄 지엠 범대위 기자회견’ 을 열었다.

지엠 범대위는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경영 실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기본계약서’ 내용은 물론 계약체결 장소와 시간조차 밝히지 않았다” 라고 비판했다. 지엠 범대위는 “제대로 실사를 다시 해 부실 원인을 규명하든가, 자료라도 공개해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볼 수 있게 하라” 라고 촉구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3월부터 한국지엠에 대한 경영 실사를 벌였지만, 과도한 연구개발비와 본사 차임금 이자, 유럽법인 철수비용과 본사 업

무지원비, 원기구조 등 수많은 의혹 중 어느 것 하나 해명하지 못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장은 5월 10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한국지엠에 8천억 원 지원을 결정했다.

지엠 범대위는 “한국지엠 정상화란 비정규직을 포함한 한국지엠 모든 노동자와 관련 산업 모든 노동자의 총고용 보장” 이라고 밝혔다.